

2011년도 복지서비스정책의 변화와 전망

Changes and Prospect of Welfare Service Policy in 2011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국 사회정책 부문의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났던 2000년대의 10년을 훌쩍 지나고, 다시 2011년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고 있다. 90년대 후반 경제 위기와 함께 고령화와 저출산의 위기에 대한 사회적 경고는, 사회안전망의 대폭 확충과 그 패러다임의 재구성을 촉진하였다. 4대 사회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등의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했던 사회보장제도는 지난 10년간 사회복지서비스제도의 대폭 확충을 통해 새로운 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2000년대 전반부터 보육서비스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 사회투자국가의 가치와 함께 보강된 다양한 돌봄관련 사회복지서비스의 시행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와 같이 긴급한 사회복지 수요 변화에 대응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양적 확대, 이를 위한 제도화의 시도를 통해 주요 사회복지서비스제도의 기반이 갖춰지면서, 이제는 새로운 관점의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추진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방향 설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2011년 추진될 복지서비스 분야 정책의 동향과 그 개요를 보건복지부의 예산안과 연두 업무보고자료를 통해 검토하고, 정책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준비되어야 할 쟁점 과제를 제시, 논의하고자 한다.¹⁾

1. 2011년 복지서비스분야 예산의 개요

2011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 보건복지부 예산은 33조 5,694억원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0. 12. 9).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보육, 교육, 다문화가정 지원 등 서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과제 위주로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 했음을 밝히고 있다.

12월 22일 보건복지부 2011년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복지부 소관 재정 규모는 정부전체 총지출 대비 10.9%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10년 예산(31.0조원) 대비 8.2%(2.6조원) 증가한 규모로서 정부 총지출 증가율(5.5%)에 비해서 높은 수준으로 제시되었다(보건복지부 예산을 포함한 (광의의) 복지 분야는 86.3조원으로 '10년 예산 대비 6.3% 증가한 규모임).

특히 '보육·장애인 분야는 '11년 친서민 정

1) "저출산·고령사회" 부문에 대한 원고는 별도로 준비된 바, 보육서비스는 본 고의 논의에서는 제외하고 사회복지, 아동·가족, 장애인복지서비스 등을 주요 논의의 범위로 포함함.

책의 핵심 분야로 설정하여, 보육 분야의 경우, 전체 영유아 가구의 70%까지²⁾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무상보육의 토대를 마련하는 예산안이 마련되었고, 장애인 분야에서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조기 도입('11.10월 잠정)을 통해 선진국형 복지제도의 도입을 마무리하고, 직업재활과 함께 재정일자리 확충(7천개에서 1만개로) 등으로 자립기반의 강화'를 추진하는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예산은 전반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다. 보건복지부 소관 분야별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아동, 장애인, 보육 및 저출산, 노인 부문을 포함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예산은 2009년 전체의 21.2%, 2010년 21.3%에

서, 2011년 예산은 21.9%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보육 및 저출산 예산 비율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2. 2011년 복지서비스 세부 분야별 정책 방향

보건복지부의 2011년 예산안과 연두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아동, 장애인,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전달체계 등의 세부 부문별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2011년 보건복지부문 분야별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전체(사회복지 + 보건)	283,622	100.0	310,195	100.0	335,694	100.0
사회복지	217,038		239,332		262,993	
- 기초생활보장	71,355		72,865		75,168	
- 공적연금	81,732		95,811		109,106	
- 사회복지일반	3,830		4,535		5,301	
- 사회복지서비스		21.2		21.3		21.9
• 아동·장애인등	9,104	3.2	8,933	2.9	10,512	3.1
• 보육 및 저출산	18,483	6.5	22,022	7.1	25,600	7.6
• 노인	32,534	11.5	35,166	11.3	37,306	11.1
보건(보건의료 + 건강보험)	66,584		70,863		72,701	

주: 1) 2011년은 국회최종예산안임.
 자료: 보건복지부, 주요업무참고자료, 보도자료 인용

2) 4인가구 기준 무상보육 소득인정액이 월 258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인상됨.

1)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 강화

아동부문에서는 ‘아동 정책을 지역중심으로 개편하고,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확대’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를 위하여 입소율이 낮은 대규모 시설은 단기보호, 자립지원시설 등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입양, 가정위탁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학대 부모에 대한 친권제한(아동복지법 개정),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및 입양숙려제 도입(입양특례법 개정 추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둘째, 아동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하여,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에게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설치 지역을 현재 100개 지역에서 2011년 13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기존 센터 산하에 2~3개 지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저소득 아동의 사회진출시 자립에 필요한 비용을 본인·정부 매칭으로 적립하여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대상을 올해 시설·위탁아동 38천명에서 2011년에는 수급자 2세 이하 아동을 추가하여 42천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을 현재 2,946개소(320만원/월)에서 2011년 3,260개소, 월 370만원으로 확대하고 시설·종사자 기준 강화로 이용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거점센터, 야간보호, 다문화·중고생·장애아동 전용 등 맞춤형·특화형 지역아동센터를 육성하고(거점센터, 야간보호 등 500개소에 대한 월 50~100만원 추가 지원),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지원하는 기업네트워크를 구성해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아동 보호서비스 강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셋째, 부처별, 기관별로 분절되어 있는 아동 정책을 지역별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아동 정책조정체계 확립하는 방안으로서, ‘시군구 드림스타트 센터’를 지역거점센터로 확대·개편하고, 분야별로 분산된 아동지원기관을 통합하여 ‘인구아동개발원’ 설립 추진을 검토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2)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2011년 장애인복지부문 제도 변화의 핵심은 무엇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현행 활동보조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여, 2011년 10월부터 중증장애인 5만명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목욕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는 올해 3만명에서 2만명이 확대되는 것이며, 등급에 따라 올해 월 평균 58만원 수준의 서비스가 69만원 수준으로 상향 제공되는 것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15% 내에서 본인부담이 이루어지게 된다.

둘째, 장애인의 자립여건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올해 7천명(204억)에서 1만개 이상으로 확대(273억)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기능보강 사업을 올해 119억원에서 2011년 24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도 확대한다.

셋째, 중증 장애아동 가정에 이루어지고 있는 돌보미 파견 서비스를 올해 688명에서 2011년

2,500명으로 확대한다. 이는 연 320시간동안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외출 지원, 응급조치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뇌병변·자폐 등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언어·음악·미술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를 37천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481억원).

3)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창출

보건복지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예산 1.2조원, 일자리 35만명 규모로 정부 전체 직접 일자리 사업 중 예산면에서는 44%, 일자리면에서는 64%를 차지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확충에는 신규제도의 도입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첫째, 2011년 시행 예정인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를 통해 활동보조인 일자리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서비스 이용대상이 3만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일자리도 19천명에서 32천명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간병서비스 시범사업('10.5~12) 결과를 평가하여 구체적 실행방안이 마련되면 이에 따른 일자리 확대도 예상된다.

둘째,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위한 정책으로서, 돌봄 공통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인력양성 체계를 마련하고, 돌봄 산업 육성을 위한 '돌봄서비스 육성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의 보편적 수요가 확인된 아동발달, 노인건강생활, 장애인 사회참여, 건강가정 등 4개 분야 10대 유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신규시장 촉발을 위한 초기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공모 시 신규사업 예산 253억원 우선 지원하고, 표준모델을 제시하는 방안이 포함

되었다. 한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인증제도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미 형성된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서, 보육 표준보육과정의 품질 제고와 특기활동 적정화 등 다양한 수요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보육교사, 특기강사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올해 1,213천명에서 2011년 1,249천명으로 확대되면 일자리도 214천명에서 229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자 확대, 재가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 복지요구 사업소종사자 등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고 있다. 서비스이용자가 올해 309천명에서 341천명으로 확대되면, 일자리는 199천명에서 233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넷째, 보건복지분야 제3섹터 활성화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 제공형"기관의 고용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의 생성과 참여를 유도하여 올해 38백개에서 2012년까지 58백개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시에 고용실적을 반영하여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기본 재산 요건의 완화 등을 통해 비영리법인 설립 확대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4)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먼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2단계 도약을 기점으로 추진될 과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연계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타

부처·지자체·민간복지자원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것인데, 모든 부처의 복지급여, 복지서비스의 자격 및 이력정보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하여 현재 4개 부처 112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관리를 2011년에는 11개 부처 149개 사업으로, 이력관리는 13개 부처 292개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지자체 개별 복지서비스(63종)에 대한 신규 통합관리도 이루어진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을 통해 주요 민간 나눔기관까지의 연계 확대도 추진될 예정이다.

‘전부처의 복지사업을 통합 관리’하여,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유사·중복 복지사업의 통합 및 조정, 신규 복지서비스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선정기준, 조사기준, 지급기준, 사후관리 등 보건복지사업의 각종 기준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며, 복지급여 사후관리 일원화를 위해 복지급여통합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 복지서비스까지 사후관리를 추진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둘째, 모든 부처의 복지급여, 복지서비스의 원스톱 신청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현장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기한다는 것이다. 현재 읍면동에 신청가능한 사업이 4개부처 112개 사업에서 2011년 6개 부처 119개 사업, 2012년 이후 전부처 복지사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된다고 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신청하고 처리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On-Line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2011년 9월부터 우선 보육료 및 유치원비 지원을 추진하고, 학교급식비,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수요가 큰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계

획이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군구 서비스연계팀과 읍면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민정책에 대한 안내 및 연계를 통해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한다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셋째,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자체 사회복지 인력 확충방안 마련이 추진되고, 복지 전담공무원이 대민 현장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지직·행정직 등 복지담당 인력 간 합리적인 업무 분장 방안이 마련되며,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발굴·관리하고 비수급빈곤층 등 복지수요자 욕구에 맞추어 통합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지역 유형별·가구 특성별 수요에 맞는 사례관리 모델 및 매뉴얼 개발·보급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연동하여 복지전달체계의 전문성·통합성·접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안 마련이 추진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3. 복지서비스분야의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지난해 12월 22일 개최된 2011년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는 현 위치 복지분야에 대한 평가로서, “첫째,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서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근로무능력자, 빈곤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체계는 지속적으로 내실화할 필요, 둘째, 근로빈곤층이 증가 추세이나, 수급자 위주의 분절적 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차상위→중산층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정책대응은 부족, 셋째, 지속적인 복지재정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구축은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현금급여의 확대만으로는 성취하기 어려운 자활 및 자립능력의 인적 역량 강화, 이를 위한 인적 서비스(human services),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단위 공공-민간 복지전달체계의 전면적 구도 전환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즉, “복지수요자의 체감도를 높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2011년의 당면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하던 복지제도는 큰 폭의 사회복지서비스 제도화를 통해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올해 들어 ‘무상급식’이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통해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여전히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 선거가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 뿐, 이제 한국 복지 체계의 질적 전환기를 지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즉, 복지제도 형성기에 일반적으로 공감되던 ‘제한적 자원 배분과 잔여적, 선별적 복지’는 더 이상 우리 국민 모두가 지지하는 구조가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세부 복지영역별로 해당되는 국민들이 사회적 서비스로서 이용하고 수혜받기를 원하는 복지제도에 대한 지지와 합의가 확인되는 정책 형성과정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도 해석된다. 따라서, 사회적 서비스의 이용·수혜에 대한 실질적 수요와 조세(혹은 사회보험료) 부담, 자원 배분으로 이

어지는 정책 수요관리의 합리화, 선진화도 당면한 과제로 보인다.

다음은 2011년에 중점을 두어 고려해야 할 세부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체계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이 추진되면서, 2009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제1차 시범사업이 실시되었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10.9), 12월에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 10월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그간 사용해 왔던 ‘장애인장기요양보장’ 대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조세에 기반을 둔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계에서는 자부담의 무료화 문제, 대상자가 1급에 한정되는 등의 등급판정체계 문제로 이의 제기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2차 시범사업(’10. 11~’11. 3)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 분석하고 2011년 10월 시행예정인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세심한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이는 첫째, 지체 장애와 요양 중심의 평가도구에 대한 검토, 둘째, 현행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에 더하여 주간보호, 복지용구 지원 등의 급여를 포함하는 등의 급여 범위 검토, 셋째, 현행 단일 수가를 급여강도 등에 따라 조정하는 수가체계, 자부담체계 등의 검토, 넷째, 서비스 제공인력으로서 활동보조인의 자격

기준, 야간이나 휴일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가를 검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2) 안전한 아동 양육 및 돌봄 여건의 조성

2010년 아동복지분야에서 추진되었던 정책은 아동범죄 예방차원의 안전지킴이제도 확대, 아동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CDA)의 지속화, 방과후 아동돌봄서비스의 확대 및 드림스타트사업의 공고화 등을 포함한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아동성폭력등 아동 안전과 관련된 사고의 빈발로 인하여, 아동대상 범죄 및 실종예방, 비행소년 선도 등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 제도를 확대하였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을 통해서 요보호아동의 자립을 도모하였다. 취약아동의 통합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방과후 아동돌봄서비스의 확대 및 드림스타트 사업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아직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지킴이제도의 역할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경우는 각 사업간 중복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연계성이 부족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낮은 실정이다. 드림스타트사업도 시범지역이 적어 많은 취약아동이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한편, 2010년에는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을 위한 사례관리사업과 아이돌보미사업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연령의 확대도 이루어졌다. 즉, 취약 한부모가족 대상 여성가구주 사례관리

의 확대를 추진하여 2009년 5개 시·도, 5개소에서 올해는 16개 시·도, 17개소에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며, 기존 아이돌보미 사업의 지속과 함께 2010년 '영아돌보미' 사업이 신규 실시되어 2009년 만10세 미만 48천명에서 올해는 만12세 미만 57천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재가 및 시설거주 한부모가족의 자립률이 미약하여 빈곤층화의 우려가 여전히 높고 적절한 자녀양육이 어려워 빈곤의 세습화 가능성 높은 실정으로,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적극 고려한 효과성 높은 자립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학력수준, 자격증 소지, 연령, 남녀 등을 고려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한부모가족 자립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2011년에는 먼저 아동 안전지킴이제도 관련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동범죄 예방과 일자리 창출 양자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방과후 아동돌봄서비스 체계와 유사중복기능을 하는 기관간 역할의 정비, 지역아동센터 서비스의 질적 제고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사례관리의 내실화를 기치로 드림스타트를 아동복지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고, 드림스타트 실시 지역의 확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드림스타트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방과후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등 관련 인프라의 연계가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이다.

한부모가족 자녀의 방과후 돌봄 공백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어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과 학력부진 및 일탈 우려에 대한 대

책이 필요하다. 아이돌보미 사업의 내실화와 지원 수준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중심의 방과후 보육·교육서비스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실질적이고 효과성 높은 통합사례관리를 위하여, 사례관리사의 자질 검증 및 역량 강화,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기관과의 협력방안 모색, 정기적 효과성 평가 등 성과관리의 강화도 요구되고 있다.

3)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지역복지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지원 시스템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대폭 개편됨에 따라, 그간 추진해 오던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혁신적인 정보관리·업무지원 시스템이 설계되면서, 국민 복지체감도 향상을 비롯한 정책 성과, 행정 및 재정 효율화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시스템 안정화 및 사용자의 적응과정에서 지자체 현장의 다소 혼란이 있었으나 안정화 추세에 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활용에 따라 공적자료에 의한 변동분 일괄 제공 등으로 그동안 미진했던 공공복지급여 ‘사후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이로 인한 제도 운영의 효율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산조사에 치중된 지자체 복지행정 업무 구조를 서비스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다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 읍·면·동의 60%에는 복지직이 1인 이하 근무하고 있어, 찾아가는 서비스, 본격적인 사례관리

등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는 구조적인 제한점을 극복할 대안도 절실한 부분이다.

2011년에는 시스템의 고도화, 병행되었던 복지제도의 개선, 전달체계상의 누적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 대책의 추진이 현안과제가 될 것이다.

먼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활용을 통해 복지급여의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되, 기초보장을 비롯한 복지급여 ‘모니터링’ 등 전반적인 제도운영의 틀을 개선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중심으로 노동부 Work-net 등 유관기관과의 실질적인 정보교류 및 업무 협력, 연계서비스가 가능한 구도 마련(행정안전부 “부처간 복지정보연계” 시스템 구축 추진중)이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일선의 복지서비스 수행 구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근본적인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복지정책, 복지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새로운 지원 방식 및 협력 제도가 모색되어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복지를 위해 지역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할 지자체 부서간 인력 및 업무 배치 문제,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례관리 등의 적극적인 서비스 행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여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더 이상 늦추어 곤란한 부분이다.

이는 결국 지역단위에서의 민과 관의 협력기반 강화의 과제와 함께 지역복지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접근될 수 있다. 실질적인 국민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지 자원의 확대가 필수적이며, 이는 공공정책을 통한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 참여를 통한 가용자원의 확충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지역사회 차원의 대안 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이다.

4) 공공-민간 협력에 기반한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2010년에는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가봉사단’의 도입이 검토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현황을 감안하여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적절한 대안에 대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표적 외국사례로 검토되고 있는 미국 AmeriCorps의 성공요인, 한국 상황과의 차별성을 감안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은,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참여와 자원봉사가 일상화되어 있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있는 민간기관이 다수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민간과 공공의 수평적 협력 관계가 정착되어 있다. 국가봉사단의 전통을 바탕으로 VIP의 강력한 리더십은 연방예산 확보를 용이하게 하였고,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단체에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복지부가 발표한 서민희망본부 10대 브랜드

과제에는 ‘나눔 활성화 종합대책’, ‘제3섹터 활성화’ 등이 포함되었다(2010. 11. 16 발표). ‘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 확대, 나눔에 대한 인식 제고, 제도 개선등을 통한 나눔확산 문화 조성’, ‘제3섹터와 자원봉사, 민간복지기관 등의 연계’ 등의 세부과제가 제시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2011년에는 민간자원의 효율적 동원·활용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동태적 상호작용을 유도하여,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모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에 의한 관 주도 사업이라는 비판과 봉사단의 정치적 왜곡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국가봉사단의 도입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직접서비스 제공방식이 아니라, 지역사회 민간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간자원의 동원 확충, 활용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촉진, 핵심 민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주도적 매개기능을 담당하는 민간 비영리단체의 육성(재정지원 및 대정부 관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지역사회 민간단체의 지원·관리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